

5·18 피해자 4412명 심층 실태조사 무산

트라우마·생활실태 등 객관적 자료 확보...40년만의 첫 시도
국비 확보 못하고 광주시 자체예산 편성해 추진 계획도 없어

5·18민중항쟁 이후 40년만에 처음 계획됐던 5·18 피해자 심층 실태조사가 사실상 무산됐다. 광주시가 5·18민중항쟁 40주년을 맞아 내년도 국비사업의 하나로 추진했으나 국비를 단 한푼도 확보하지 못한 데다, 광주시 자체 예산을 편성해 추진할 계획도 없기 때문이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국비 5억 원을 지원받아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5·18민주유공자 4412명을 대상으로 생활 실태 및 후유증 조사를 할 계획이었다. 민중항쟁 발발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실태 조사가 단 한 번도 없었던 터라, 40주년을 맞아 유공자 피해 실태를 전수 조사해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실태조사 대상은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유족 등 177명, 부상자 또는 부상자 유족 2765명, 구급자 등 기타 피해자 또는 유족 1470명이었다.

40년이 지난 후 5·18 피해자의 트라우마, 경제적 환경 등 생활 실태, 직업 보유 등 사회적응 정도를 전수조사해 국가폭력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고 치료 및 지원의 필요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보하겠다는 구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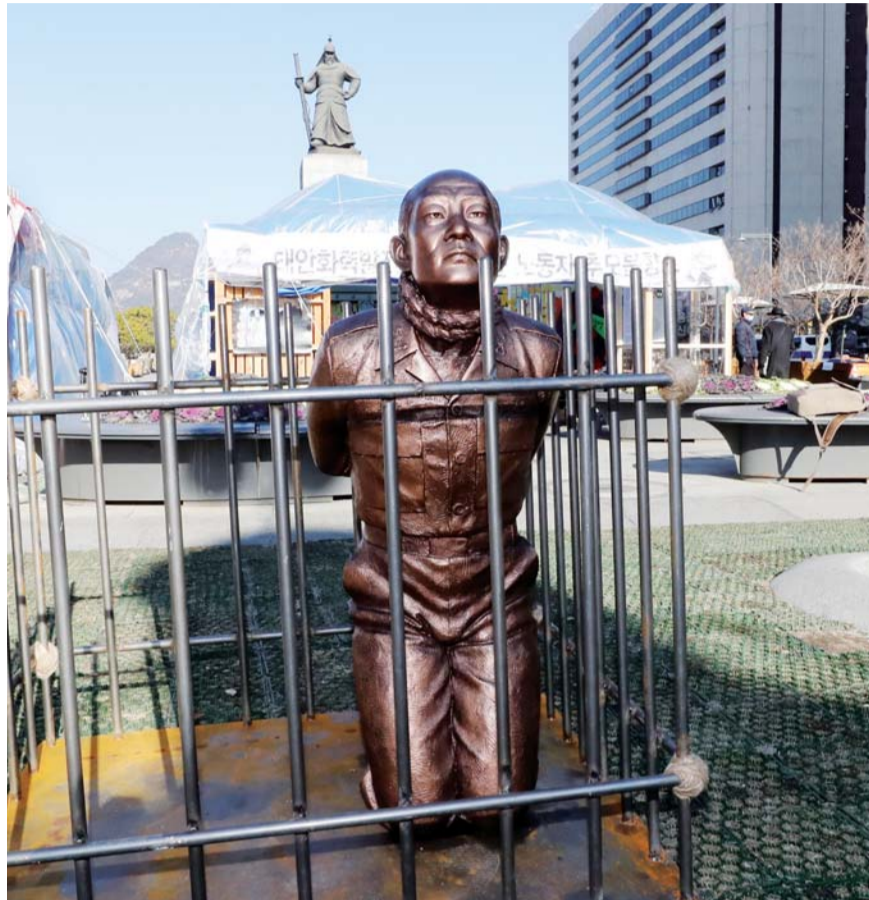
대면 조사와 구술 채록 방식의 조사를 통해 당시 충격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계속 이어지는지, 가족의 피해가 또 다른 가

족에게 옮겨가지 등을 조사해 파괴된 개인사를 복원하는 데 국가와 광주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필요성도 있었다.

그러나 광주시가 국회의 내년도 예산 확정 후 지난 11일 발표한 40주년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업 목록에는 5·18피해자 실태조사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국비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5·18 40주년을 맞아 행사성 사업 8가지에는 국비 65억원이 반영됐다. 40주년 기념사업 추진비(10억), 민주인권평화근현대사 120주년 전시회(5억), 세계인권도시 포럼 5월 광주개최 사업(5억), 베니스비엔날레 5·18 특별전시회(5억원) 등이다. 베니스비엔날레 5·18 특별전과 세계인권도시 포럼 5월 광주개최 사업의 경우 이용섭 광주시장이 특히 관심을 표명했던 사업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광주시가 국회 예산 심사 단계에서 5·18 피해자 실태조사 사업비 확보보다 행사성 예산 확보에 주력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5·18 피해자 실태조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기에 애초부터 예산에 누락됐으나 광주시가 지역 국회의원 도움을 받아 총력을 다한 결과 정부 예산안에 포함시켰던 사업"이라며 "그러나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최종 제외



'12·12' 40주년... 철창에 갇힌 '전두환 조형물' 12·12 군사반란 40주년인 12월 5·18 관련 단체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두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제작한 동상 조형물을 세워놓았다. /연합뉴스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태조사 필요성은 있으나 사업 추진 주체가 국가 보존처 사무인 것 같다는 판단에 따라 현

재 광주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청 크리스마스트리 점등 12일 오전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이 아이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국립심혈관센터 설치 내년 본격화

사업비 예산 2억원 반영
광주연구개발특구 기대

수년째 표류하던 국립심혈관센터에 대한 구축 방안 연구 사업비가 내년 정부 예

산안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센터의 장소와 광주 북구를 포함한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설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12일 "최종 확정된 2020년 정부 예산안에 국립심혈관센터 구축 방안 연구 사업비 2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국립심혈관센터 호남권 설치의 문재인 대통령의 광주·전남 상생공약으로, 지난 2007년부터 전남도와 장성군, 지역 국회의원 등 각계각층에서 호남권 유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지난 2017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국회의원이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후 보건복지부가 2018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국립심혈관센터 구축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한 바 있다. 연구용역 결과 인구 고령화구조에서 심뇌혈관질환 분야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국가적 예방 및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심혈관질환은 암에 이어 우리나라 국민 사망 원인 2위(24.3%)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진료비만 2016년 기준 9조 6000억원에 이르고, 사회·경제적 비용도 2015년 기준 16조7000억원에 달한다.

한편,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할 호남권 국립심혈관센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는 센터 규모와 기능·역할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방안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국립심혈관센터가 호남권 첨단과학 기술이 집적된 광주연구개발 특구에 설치되면 현재 전국 14개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총괄하고, 오송, 대구·경북의 첨단의료복합단지 등과 함께 심혈관계 스텐트, 인공판막 및 심혈관계 증재술에 이용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을 개발하는 의료산업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전공대 법인 설립 '초읽기'

교육부 심사 20일 열려

한전공대(가칭)의 연내 법인 설립을 위한 교육부 심사가 오는 20일 열린다. 다만 교육부 측은 한전공대 안전 상정 여부를 12일 현재까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20일 '2019년도 제8차 대학설립심사위원회'가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다. 한전은 지난 9월 30일 교육부에 한전공대 법인 설립을 신청했다. 한전은 법인 허가 신청서를 내면 서 인원 명부, 설립운영 규정, 대학 설립

취지 등 7종의 필요 서류를 제출했다.

8차 심사위원회에 한전공대 안전이 상정돼 허가 결정이 나면 한전공대 측은 인가를 낸 3개월 안에 이행사항을 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 대학설립 등기서류, 재산확보명세서 등 이행 조건을 충족하면 비로소 학교법인 설립 절차가 마무리된다.

한전은 앞서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서 김종갑 사장을 초대 이사장으로 선임했고, 이사 7명·감사 후보 2명 등 임원진 9명을 선출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인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아이들 푼돈 터는 국립광주과학관 ▶6면
- 책세상·유튜버가 말하는 유튜버 ▶14·15면
- 광주 동성고 '야구인의 밤' 행사 ▶20면

소상공인 지원 복구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문의전화 | 복구 민생경제과 (062-410-6681)

소상공인 종합컨설팅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1:1 맞춤형 전문컨설팅(마케팅, 세무, 노무 등 전문분야)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상가번영회 활성화 지원

상가번영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및 교육을 지원합니다.

특례보증 이차보전지원

영세 소상공인에 특례보증대출 및 이차차액을 지원합니다.

복구 창업스타터 육성

예비 소상공인의 '교육-현장체험-자금' 풀코스를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실내·외간판, 인테리어, 위생설비 등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을 지원합니다.